

# 임금불평등과 사회복지지출

## - 선진 국가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김 영 범\*

### ◀ 요약 ▶

본 연구의 목표는 사회복지제도와 임금불평등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는 가사일이나 돌봄 서비스를 대신하여 자유시간을 제공하고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그 시간을 인적자본을 쌓고 좋은 일자리를 탐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설 아래 시장임금의 불평등이 사회복지 지출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 17개국의 1990년에서 2010년까지 자료로 구성된 불균등 시계열·횡단면 결합자료 이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소득보장 지출과 사회서비스 지출 각각은 시장임금 불평등을 확대하는 요인이지만 두 변수의 상호작용 효과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시장임금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두 가지 모두 균형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사회복지지출, 소득보장지출, 사회서비스지출, 소득불평등, 세계화, 숙련편향 기술발전, 서비스 산업

\*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부교수(twoponej@gmail.com)

## 1. 들어가며

1980년대 이래 근로자 간 소득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은 이미 많은 연구들을 통해 알려진 사실이다(OECD, 2011a; Kenworthy and Pontusson, 2005). 소득불평등은 그것을 시장임금으로 측정하든 가처분소득으로 측정하든 1980년대 이후 대부분 국가들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소득불평등을 측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지표인 가처분 소득에 대한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1980년 .307에서 2010년 .380으로 증가하였고, 영국에서도 1985년 .309에서 2010년 .341로 증가하였다. 복지국가가 가장 발전했다는 스웨덴의 지니계수도 1983년 .198에서 2010년 .269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소득불평등 증가 추세로부터 예외는 아닌데, 2006년 .306에서 2010년 .311로 소득불평등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OECD, 2014).

1980년대 이래 왜 임금 혹은 소득 불평등이 증가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들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 경제적 세계화론(Meschi and Marco, 2007)에 의하면 선진국의 비숙련 직업이 저임금 국가들로 이전함에 따라 이 직종의 임금이 더욱 낮아지게 되어 임금 불평등이 증가했다고 주장한다.<sup>1)</sup> 다른 한편으로 숙련편향적 기술발전(skill biased technology development) 역시 임금 혹은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Fernandes, 2001; Katz and Autor, 1999; DiPrete, 2007). 숙련편향적 기술발전으로 인해 고학력, 고숙련 직종에서 일할 수 있는 근로자의 수에 비해 일자리가 더 많이 공급됨에 따라 고임금 직종의 임금은 증가한 반면 저임금 직종의 임금은 감소했다는 것이다. 서비스 산업의 증가 역시 임금 혹은 소득불평등을 낳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잘 알려진 바지만 일부 서비스 산업은 비용악화위기(cost disease)로 인해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임금비용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Baumol, 1967). 1980년대 이래 서비스 산업의 확대로 인해 저임금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소득불평등이 확대되었다.

---

1) 정보통신기술과 경제적 세계화로 인해 비표준근로관계가 확산되었고, 그 결과 임금 불평등은 더욱 증가하였다.

사회복지제도가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한다는 점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한 예로 사회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진 북구 유럽 국가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소득불평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소득불평등에 대한 선행 연구와 사회복지제도의 불평등 완화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Bradley et al., 2003; Kenworthy, 1999, 2012; Kenworthy, and Pontusson, 2005; Korpi and Palme, 1998)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제도와 임금불평등과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제도의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가처분 소득의 불평등을 얼마나 완화시키는지 분석하는데 집중한다. 본 연구는 일자리 탐색이론과 인적 자본이론의 주장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지출 많을수록 임금불평등이 낮은지 확인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제도는 인적자본을 쌓고 좋은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로 인해 임금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주요 제도인 복지국가가 갖는 다양한 사회적 영향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본 논문의 연구 내용을 기술한 후 사용된 자료와 분석 방법을 기술한다. 3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국가별로 나타나는 임금불평등 추세를 살펴보고 다변수 분석을 통해 임금불평등과 사회복지지출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다. 마지막 4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함의를 살펴본다.

## 2. 선행 연구 검토 및 연구 방법

### 1) 선행연구 검토

#### (1) 임금불평등의 원인

소득불평등이 산업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역U자의 모습을 보인다는 쿠즈네츠(Kuznet, 1955)의 주장 이래 소득불평등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OECD, 2011a; Nielsen and Alderson, 1995;

Meschi(et al.) 2007).

1980년대 이래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에서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다시금 왜 소득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목하도록 만들고 있다. 시장임금의 불평등이 증가하는 현실에 대한 설명으로는 노사관계 제도의 차이와 더불어 경제적 세계화, 서비스 산업의 확대, 그리고 숙련편향적 기술발전 등이 거론되고 있다(Appelbaum (et al.), 2010; Bosch and Lehndorff, 2005).

경제적 세계화와 소득불평등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OECD, 2011a; Meschi(et al.), 2007]. 경제적 세계화를 강조하는 입장은 경제적 세계화 결과 고속런 일자리에 대한 투자는 증가되는 반면 저임금 일자리는 해외로 이전됨에 따라 숙련이나 기술에 따른 임금불평등이 확대되었다고 주장한다. 경제적 세계화가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유화나 무역의존도와 같은 경제적 세계화와 임금불평등 사이의 관련성이 크지 않다는 경험적 연구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OECD, 2011a).

서비스 산업의 확대가 임금불평등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은 보몰(Baumol, 1967)이 제시한 서비스 산업의 비용악화 위기를 통해 제시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서비스 산업은 생산성 증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임금을 통해 가격을 낮추어 수요를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서비스 산업의 고용증가는 곧 저임금 일자리의 증가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1980년대 이래 소득불평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주목받는 것이 숙련편향적 기술발전(skill biased technological development)이다. 이 주장에 의하면 민간부문의 연구·개발(R&D) 투자 증가가 전문 기술직 및 숙련 근로자의 수요 증가와 임금 인상으로 이어진 반면 저숙련 근로자의 경우는 업무 자동화로 노동력 수요 감소와 임금 하락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노동시장관련 제도 역시 임금불평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을수록 그리고 기업 단위에 비해 산업이나 국가 단위에서 단체협상이 진행되는 경우 임금불평등은 감소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이는 노조가 노동자의 집합행동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 내부의 임금 격차를 축소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이다(Korpi, 1987).

저임금 집단에 대한 연구는 임금결정제도가 얼마나 시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가에 따라서도 임금수준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예를 들면 최저임금제도가 있는 경우, 또는 서비스 산업의 일부가 공공부문으로 운영되는 경우 등은 생산성 변동이 임금에 주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저임금 계층의 임금 인상이 용이하다는 주장을 제시하기도 한다(Bosch and Lehdorff, 2005).

이외에 경제상황 역시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주는데,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기업은 임금이 낮은 저숙련 근로자부터 해고하기 때문이다. 실업이 증가하면 사회 전체의 소득 불평등은 증가하게 되지만 고용되어 있는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소득불평등은 감소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sup>2)</sup>(Kenworthy and Pontusson, 2005).

## (2) 복지지출과 소득불평등

소득불평등과 복지지출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이상봉·한준, 2012; 채구묵, 2012; Bradley et al., 2003; Kenworthy, 1999, 2012; Kenworthy, and Pontusson, 2005; Korpi and Palme, 1998). 복지지출이 저소득층을 빈곤의 멍에 가두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킨다는 주장과 함께, 시장임금을 재분배하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킨다는 주장도 제시되고 있다.

복지제도와 소득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다양한 접근에도 불구하고 주로 가처분 소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즉 선행 연구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부분은 복지제도를 통해 시장소득이 얼마나 재분배 효과를 갖는가 하는 점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복지제도가 시장임금의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복지국가는 시민들의 소득역량에 영향을 준다. 즉 복지제도는 그것이 갖는 사회투자 기능을 통해 소득을 얻는데 필요한 인적 자본을 확대하고 좋은 일자리를 찾는데 시간과 노력을 쏟을 수 있도록 자원을 지원한다(Esping-Andersen and Myles, 2011).

첫째, 인적 자본이론에 의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는 양질의 인적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적 자본을 쌓기 위해서는 다른 활동에 사용되는 시간

---

2) 저임금 근로자 중 일부가 실업자가 되어 통계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소득이 없는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구 단위의 소득불평등은 증가한다.

과 자원을 인적 자본을 쌓기 위해 활용해야만 한다. 각종 사회서비스는 여성을 포함한 가사활동 담당자에게 가사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인적 자본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일자리를 찾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다. 일자리 탐색이론이 주장하듯 현재의 일자리보다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 자신의 능력에 부합되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실업보험이나 아동 수당 혹은 연금 등은 자신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도록 자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여기서 인적 자본을 쌓고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와 소득보장 두 가지 제도 모두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자유로운 시간만 주어질 경우 그 시간은 저임금의 경제활동에 투자될 가능성이 크며 소득이 보장되는 반면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인적자본 축적이나 일자리 탐색에 투자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적자본을 위해 투자하고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정보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가사 활동을 대신하는 서비스를 통해 자유로운 시간을 얻는 것과 더불어 그 시간을 자신의 인적자본을 쌓는데 투자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지출과 소득보장 지출의 상호작용이 갖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 2) 연구 방법

소득불평등은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측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Kenworthy, 1999). 즉 가구소득이냐 개인소득이냐, 혹은 시장임금을 분석하느냐, 또는 가처분소득을 분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소득 기준이 아닌 개인단위의 임금소득 기준으로 소득불평등을 분석한다. 이는 본 연구의 목적이 복지 지출과 임금소득 불평등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소득불평등 척도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활용하거나 소득분위비율을 통해 측정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소득불평등을 보여주는 지표로 지니계수, 90/10분위 배율, 50/10분위 배율, 90/50분위 배율 등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임금소득 불평등을 분석하기 위해 임금소득 90/10분위 배율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sup>3)</sup>. 이 지표는 전일제 피용자의 임금총소득(gross earnings of full time dependent employee)의 90분위 대 최저 10분위의 임금소득의 배율(Ratio of earnings decile limits of the 9th decile and the 1st decile)을 의미한다(OECD, 2014).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사회복지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적 지출과 사적 의무지출(public and mandatory private expenditure)의 국내총생산 비율을 활용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는 총 9<sup>4)</sup>개 범주로 구성되며, 각 범주에 해당하는 비용을 소득보장 지출과 사회서비스 지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본 투자와 구직활동을 위한 자유시간은 소득보장과 더불어 사회서비스 지원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9개 범주에 대한 두 영역별 지출 합계의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을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이외에 정치적 특성, 노동시장 제도, 경제적 세계화, 숙련편향 기술발전, 서비스 산업화 등의 이론을 검증할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결과(Bradley et al., 2003; Kenworthy, 1999, 2012; Kenworthy and Pontusson, 2005; Korpi and Palme, 1998)를 바탕으로 분석에 포함된 주요 변수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에 포함된 변수는 다음과 같다.

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가처분 소득만을 대상으로 하여 지니계수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90/10분위 배율을 통해 시장소득 불평등을 산출하고 있다(임완섭·노대명, 2013).

4) 노령, 유족(survival), 장애, 건강, 가족,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실업, 주택, 기타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에 대한 지출을 비교 가능하도록 제시한다(OECD, 2014).

[표 1] 분석에 포함된 변수

구분	이름	내용
종속변수	90/10분위 임금 배율	• 소득 하위 1분위 한계 임금 대비 상위 9분위 한계 임금 배율 자료: OECD, 2014
독립변수	정부 내 우파 정당 참여율	• 정부 내 우파 정당 인사의 비율 자료: Armingeon (et al.), 2011
	정부 내 좌파 정당 참여율	• 정부 내 좌파 정당 인사의 비율 자료: Armingeon (et al.), 2011
	서비스 산업 고용비율	• 근로자 대비 서비스업 고용비율 자료: OECD, 2014
	공공부문 고용비율	• 경제활동인구 대비 중앙 및 지방정부 고용비율 자료: 경제활동인구자료는 Armingeon (et al.), 2011 정부고용비율은 ILO, 2013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자료: OECD, 2014
	실업률	자료: OECD, 2014
	실질 GDP증가율	• 실질 GDP 증가율 자료: Armingeon (et al.), 2011
	1인당 GDP	• 실질 1인당 GDP 자료: OECD, 2014
	파트타임고용비율	자료: OECD, 2014
	노동조합조직률	자료: Visser, 2011
	고용보호 엄격성	자료: OECD, 2014
	금융시장자유화	• 복수환율 존재여부, 경상거래 제약여부, 자본거래 제약여부, 수출 수익금 일부 공출의무가 있는지 합산 (없으면 1로 코딩, 숫자가 클수록 개방) 자료: Armingeon (et al.), 2011
	무역의존도	• GDP 대비 수입+수출비율 자료: Armingeon (et al.), 2011
	연구개발비율	•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비율 자료: OECD, 2014e
	소득보장 지출비율	• GDP 대비 소득보장 지출 비율 자료: OECD, 2014
	사회서비스 지출비율	• GDP 대비 사회서비스 지출 비율 자료: OECD, 2014
	상호작용 변수	소득보장지출 비율 × 사회서비스 지출 비율
가족관련 지출비율	• 가족관련 지출을 서비스와 소득보장으로 구분하여 포함 자료: OECD, 2014	
노인관련 지출비율	• 노인관련 지출을 서비스와 소득보장으로 구분하여 포함 자료: OECD, 2014	

본 연구에 포함된 자료는 18개 국가이다. 자료 수집에 포함된 기간은 1990년에서 2010년까지이다. 시계열·횡단면 자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가에 따라 일부 누락된 자료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 변수 값이 누락된 사례를 제외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적 분석의 경우 종속변수인 90/10분위 배율이 있는 사례 259개를 대상으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다변수 분석의 경우 독립변수 중 누락이 있는 사례를 제외하여 대상 국가는 17개국<sup>5)</sup>, 분석에 포함된 사례 수는 132개이며, 분석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개별 국가별로 1개년도 자료가 누락되어 115개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다변수 분석에 포함된 국가별 연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다변수 분석에 포함된 국가와 연도

국가	연도
오스트레일리아	2002, 2004, 2006, 2008
오스트리아	2002, 2005, 2006, 2007, 2008
벨기에	1999, 2000
캐나다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덴마크	1997, 1998, 1999,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핀란드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프랑스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독일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아일랜드	1997, 2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이탈리아	2004, 2006, 2008
네덜란드	2002, 2006
뉴질랜드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노르웨이	1997, 1999,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포르투갈	2004, 2005, 2006, 2007
스페인	2004, 2005, 2006, 2007, 2008
영국	1999,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미국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5) 독립변수 중 모두 누락된 사례가 발생하여 스웨덴은 다변수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다변수 분석에 포함된 사례를 중심으로 주요 변수의 기술적 통계는 [표 3]과 같다.

[표 3] 주요 변수의 기본 통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소득90/10배율	3.21	.75	1.94	4.88
정부 내 우파 정당 참여율(%)	37.60	40.29	0	100
정부 내 좌파 정당 참여율(%)	37.14	40.68	0	100
서비스 산업 고용비율(%)	70.64	5.30	56.48	79.46
공공부문 고용률(%)	19.86	7.19	10.89	36.52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69.13	6.11	50.48	78.00
실업률(%)	6.68	2.47	2.53	15.41
실질 GDP증가율(%)	2.79	1.80	-3	11.5
1인당 GDP(달러)	31307.09	7373.908	17588.03	55799.45
파트타임고용비율(%)	16.91	5.32	4.48	36.01
노동조합조직률(%)	35.69	22.17	7.65	80.44
고용보호 엄격성	1.86	.91	.25	4.42
금융시장 자유화	2.43	.27	1.17	2.50
무역의존도(%)	71.72	31.87	20.54	184.01
연구개발비(%)	2.06	.66	.74	3.70
소득보장 지출(%)	12.95	3.61	6.9	20.2
사회서비스 지출(%)	8.99	1.65	5.6	13
상호작용 변수	119.36	45.68	38.64	208.26
노인대상 소득보장지출(%)	6.34	2.41	2.3	13.2
노인대상 서비스지출(%)	.55	.66	0	2.2
가족대상 소득보장지출(%)	1.41	.68	1	2.8
가족대상 서비스지출(%)	.92	.54	0	2.1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경제협력기구 회원국 일부 국가의 자료를 시계열로 결합한 시계열·횡단면 결합자료이다. 시계열·횡단면 결합자료는 횡단면에 따른 오차와 시계열에 따른 오차가 모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최소자승법에 따른 회귀분석(ordinary least square)을 사용해서는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다(Hick, 1994). 본 자료처럼 몇 개의 국가에 대한 다년간 자료를 결합한 자료를 적절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계열 상관과 더불어 국가별로 나타나는 속성을 통제하는 것이 요구된다.

먼저 고정효과(fixed effect) 모델에 따른 분석 결과를 대상으로 시계열 오차상관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시계열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sup>6)</sup> 이를 통제하기 위해 코크레인-

오쿠트(Cochrane-Orcutt)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변환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방법은 다음은 식으로 표현된다(Wooldridge, 2010). 이렇게 식을 변환시키게 되면 자기 상관된 부분이 제거된 오차만 남게 된다.

$$\begin{aligned} \text{A: } Y_t &= B_0 + B_1 X_t + \varepsilon_t \\ \text{B: } Y_{t-1} &= B_0 + B_1 X_{t-1} + \varepsilon_{t-1} \\ * \varepsilon_t &= \rho \varepsilon_{t-1} + v_t \end{aligned}$$

B에 자기상관계수( $\rho$ )를 곱해 A에서 빼면 아래의 공식을 얻는다.

$$\begin{aligned} \text{C: } Y_t &= (1 - \rho)B_0 + B_1 X_t + v_t \\ * Y_t &= Y_t - \rho Y_{t-1} \\ * X_t &= X_t - \rho X_{t-1} \end{aligned}$$

일반적으로 패널자료의 경우 고정효과모델(fixed effect model)이나 무작위효과모델(random effect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고정효과모델은 시계열이 2개인 경우는 일차분값(first difference score)을 구해 회귀분석을 실시하며 3개 이상의 경우는 집단의 평균에서 개별 측정치를 뺀 값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시계열이 3개년 이상의 경우 고정효과모델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평균과의 차이를 분석하는 고정효과 모델의 경우 성이나 세대처럼 시간이 지나도 변화하지 않는 속성을 계산과정에서 자동적으로 통제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begin{aligned} y_{it}^* &= \sum b_j x_{it} + e_{it} \\ y_{it}^* &= y_{it} - \bar{y}_i \\ x_{it}^* &= x_{it} - \bar{x}_i \end{aligned}$$

6) 시계열·횡단면 자료에 대해 시계열 자기상관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패널자료에 대한 울드리지 자기상관 테스트(Wooldridge test for autocorrelation in panel data)한 결과 자기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ar{y}_j = \frac{1}{n_j} \sum_t y_{jt}$$

$$\bar{x}_j = \frac{1}{n_j} \sum_t x_{jt}$$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이론적 모형은 다음과 같다.

$$y_{it} = b_0 + \sum b_j x_{it} + e_{it}$$

$y_{it}$  = 임금소득 90/10 배율

$\sum b_j x_{it}$  = 정부 내 우파정당 참여율, 정부 내 좌파정당 참여율, 서비스 산업고용비율, 공공부문 고용비율,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1인당 GDP, GDP증가율, 파트타임고용비율, 노동조합조직률, 고용보호 엄격성, 금융시장 자유화, 자본자유화, 연구개발비, 소득보장지출, 사회서비스 지출,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상호작용, 가족관련지출, 노인관련지출

$e_{it}$  = 오차

\* 모든 변수는 코크레인-오쿠트(Cochrane-Orcutt) 방법을 통해 변환되었으며, 변환된 자료는 고정효과 모델을 통해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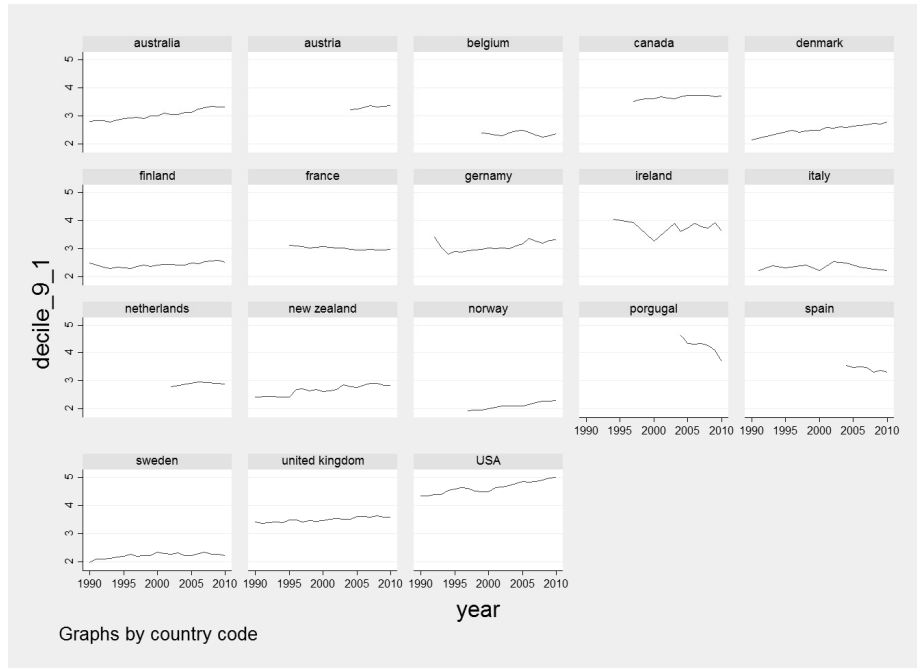
### 3. 분석 결과

#### 1) 기술적 분석

먼저 1990년대 이후 2010년까지 90/10분위 배율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의 가로 축은 연도이며 세로축은 90/10분위 배율이다. 그림이 보여주는

바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 국가별로 90/10분위 배율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미국과 포르투갈의 경우 4를 넘어서고 있어 임금불평등이 가장 큰 국가로 볼 수 있다<sup>7)</sup>. 영국의 경우도 3에서 4사이로 나타나 임금불평등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득배율이 2배~3배 사이에 있다. 특히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국가들의 경우는 소득배율이 낮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OECD, 2011a; Korpi and Palme, 1998) 가처분 소득의 불평등은 복지국가의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림 1]의 결과를 보면 임금 불평등 역시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 국가별 9/1분위 배율: 연도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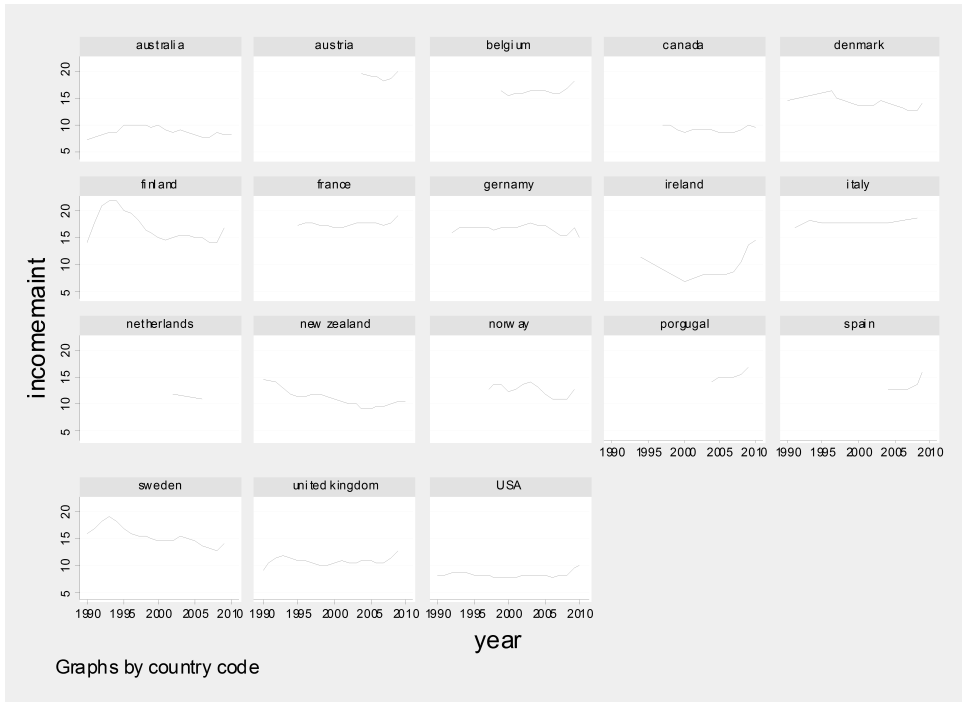


둘째, 이를 시계열로 살펴보면 국가와 년도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대부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득배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임금배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다른 국가들의 경우는 대부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교적 임금불평등이 낮은 북

7) 미국의 경우 분위 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포르투갈의 경우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 국가들에서도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는 임금불평등 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임금불평등의 증가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 대부분에서 진행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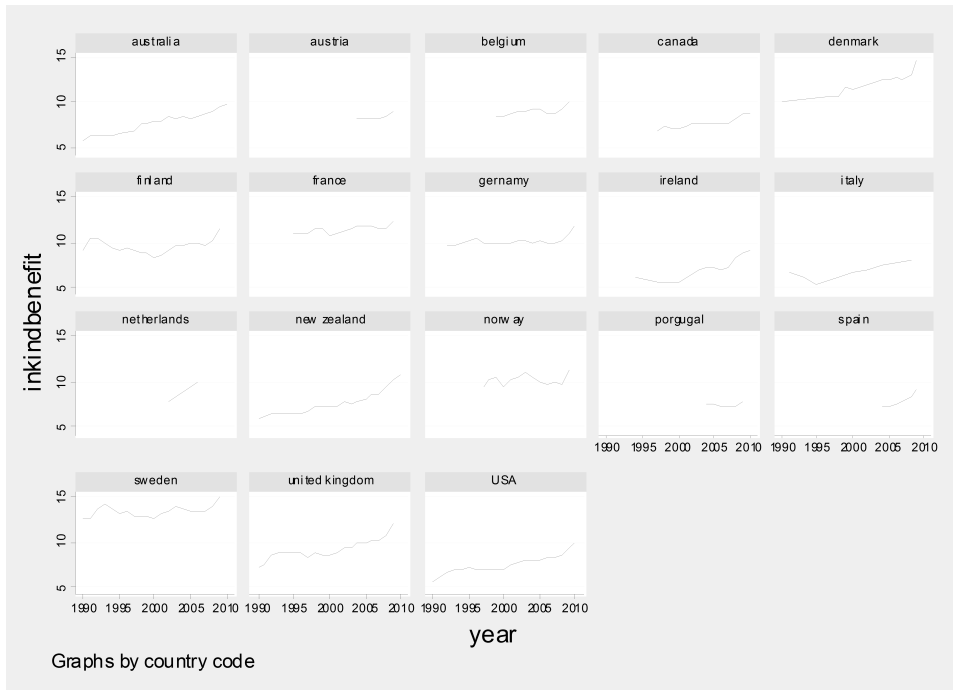
[그림 2] 국가별 소득보장 지출 비율: 연도별 비교



자료: OECD(2004)

이제 복지지출이 1990년대 이후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그림 2], [그림 3]은 국내총생산 대비 소득보장 지출과 사회서비스 지출 비율을 살펴본 것이다. 먼저 소득보장 지출 수준을 국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위의 [그림 2] 참조) 국가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지출 수준은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과 같은 북구 국가들에서 가장 높고, 영미권 국가들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국가를 제외하곤 소득보장 지출에 큰 변화가 없거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핀란드와 스웨덴의 경우 1990년대 초 급속히 증가했다가 이후 급속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들 국가들이 1990년대 초 심각한 경제위기를 경험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8)</sup>.

[그림 3] 국가별 사회서비스 지출 비율: 연도별 비교



자료: OECD (2004)

사회서비스 지출 역시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주로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 북구 국가들에서 사회서비스 지출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미국, 아일랜드 등 자유주의 국가들에서 지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기할 점은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사회서비스 지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국가 유형과 무관하게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사회서비스 지출 수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대신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얻는 데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이 이동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분석에 포함된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시장임금 90/10 분위 배율은 정부 내 좌파정당 비율, 고용보호 엄격성, 공공부문 고용비율, 파트타임고용비

8) 이들 국가들은 경제위기 과정에서 실업이 증가함에 따라 실업급여를 포함한 소득보장 지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후 재정 악화와 경제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복지지출을 축소하였다.

을, 노동조합 조직률, 소득보장 지출비율, 사회복지서비스 지출비율, 사회서비스 지출비율, 무역의존도 수준과 부적 관계를 보이는 반면, 1인당 국내총생산과는 정적 관계를 보이고 있다. 대체로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앞서 살펴본 경제적 세계화나 노동시장 제도의 영향을 방증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만 숙련편향 기술발전 이론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소득불평등과 연구 개발비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무역 의존도 수준이 시장임금 90/10 분위 배율과 부적 관계를 보인다는 점은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 무역 의존도가 저숙련 근로자의 일자리 경쟁을 강화시켜 임금을 낮추어 시장임금 불평등을 증가시키기보다는 이 집단을 노동시장에서 축출함으로써 시장임금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요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시장임금 불평등과 관련된 요인들이 무엇인지 다변수 분석을 위해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표 4]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90/10분위 배율(1)	1.00																	
정부 내 우파정당 비율(2)	.058	1.00																
정부 내 좌파정당 비율(3)	-.234**	-.641***	1.00															
서비스 고용비율(4)	.146	.155	-.148	1.00														
공공부문 고용비율(5)	-.643***	.120	-.011	.277**	1.00													
여성경제활동 참가율(6)	-.053	.01	-.098	.396***	.523***	1.00												
1인당 GDP(7)	.221**	.254*	-.221*	.534***	.124	.288***	1.00											
GDP 증가율(8)	.080	-.036	-.053	-.099	-.124	-.199*	-.129	1.00										
실업률(9)	-.122	-.22**	.196*	-.393***	-.171*	-.376***	-.539***	.067	1.00									
파트타임 고용비율(10)	-.172*	-.009	.077	.399***	.034	-.009	.271**	-.007	-.459***	1.00								
노동조합 조직률(11)	-.644***	.13	-.015	-.174*	.731***	.379***	-.069	.066	.006	-.163	1.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고용보호 엄격성(12)	-.499 ***	-.17*	.276 **	-.604 ***	.195*	-.151	-.312	-.263 **	.328 ***	-.212*	.226*	1.00						
자본 자유화(13)	.093	-.140	.009	-.077	.022	.048	.016	.014	.143	-.150	.004	.058	1.00					
무역 의존도(14)	-.249 **	.161	-.111	-.256 **	.093	-.222*	.126	.247 **	-.124	.301 ***	.360 ***	.226 **	.076	1.00				
연구개발 지출비율(15)	-.051	-.021	-.110	.208	.23 **	.351 ***	.123	-.115	.192*	-.301 ***	.326 ***	-.119	.055	-.170	1.00			
소득보장 지출비율(16)	-.559 ***	-.209*	.263	-.435 ***	-.187	-.242 **	-.372	-.284	.527 ***	-.294 ***	.247 **	.772 ***	.139	.060	.234 **	1.00		
사회복지 서비스 지출비율(17)	-.501 ***	.025	.198	.271 **	.680 ***	.315 ***	.091	-.421 ***	.023	.080	.338 ***	.368 ***	.043	-.040	.355 ***	.482 ***	1.00	
상호작용 효과(18)	-.602 ***	-.116	.249 **	-.160	.441 ***	-.039	-.232*	-.364 ***	.395 ***	-.173*	.323 ***	.681 ***	.131	.022	.332 ***	.903 ***	.802 ***	1.00

## 2) 다변수 분석

다변수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세 개의 모델을 구성하였다. 모델 1은 소득보장지출과 사회서비스 지출 두 변수와 통제변수를 포함한 모델로 구성되었고, 모델 2은 소득보장지출, 사회서비스 지출, 그리고 두 변수의 상호작용 효과를 포함한 모델로 구성하였다. 모델 3은 노인과 가족 대상 복지지출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추가하였다.

먼저 통제변수의 효과를 살펴보면 모델 1과 모델 2 모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는 공공부문 고용비율, 서비스 부문 고용비율과 무역의존도로 나타났다. 서비스부문 고용비율은 두 모델 모두에서 시장임금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 산업의 특성으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즉 서비스 산업은 쉽게 생산성을 올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임금 인상을 억제하여야 하는데, 이로 인해 서비스 산업의 고용이 증가하게 되면 저임금이 확대되어 시장임금 불평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5]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 다변수 분석

구분	모델 1		모델 2		모델 3	
	b(se)		b(se)		b(se)	
정부 내 우파 정당 비율	2e-4(6e-4)		2e-5(5e-4)		-2e-4(6e-4)	
정부 내 좌파 정당 비율	-2e-4(5e-4)		-5e-4(5e-4)		-3e-4(5e-4)	
서비스부문 고용비율	.06(.01)	***	.04(.01)	**	.05(.01)	***
공공부문 고용비율	-5.21(2.45)	*	-8.51(2.16)	**	-3.06(2.54)	
여성경제활동참가율	-4e-4(.01)		-7e-3(.01)		7e-3(.01)	
1인당 GDP	8e-7(8e-7)		3e-7(5e-7)		1e-5(5e-7)	
경제성장률	.01(.01)		.01(.01)		.01(.01)	
실업률	4e-3(.02)		-.02(.02)		-6e-3(.02)	
파트타임 고용비율	.02(.02)		.02(.02)		.01(.02)	
노동조합조직률	.02(.01)		.01(.01)		3e-3(9e-3)	
고용보호 엄격성(정규직)	-.54(.17)	**	-.40(.14)	**	-.39(.15)	*
자본자유화	.24(.26)		.14(.24)		.27(.24)	
무역의존도	.01(2e-3))	**	-5e-3(2e-3)	**	-4e-3(2e-3)	*
연구개발비 비율	.24(.14)		.14(.12)		.24(.13)	
소득보장지출 비율	-.03(.03)		.20(.06)		***	
사회서비스지출 비율	-.02(.04)		.31(.09)		***	
소득보장×사회서비스			-.02(6e-3)		***	
가족 소득보장지출					.06(.09)	
가족 서비스지출					-.19(.11)	
고령 소득보장지출					-.18(.08)	
고령 서비스 지출					-.43(.14)	
총사회복지지출					.03(.03)	
상수	-.40(.07)	***	-.53(.07)	***	-.49(.07)	***

\* p ≤ .05, \*\* p ≤ .01, \*\*\* p ≤ .001

서비스 산업의 영향과 함께 공공부문 고용비율이 임금불평등과 부적 관계를 보인다는 점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 공공부문은 주로 서비스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에 대한 생산성의 영향이 크지 않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이 용이하고 결과적으로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무역의존도 역시 두 모델 모두에서 소득불평등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저숙련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산업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저임금 국가로부터의 수입으로 대체하는데, 이로 인해 저숙련 근로자가 노동시

장에서 추출된다(Kenworthy and Pontusson, 2005). 무역의존도의 효과는 이러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세계화의 또 다른 측면인 자본자유화의 경우는 임금불평등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정부 내 좌·우파 정당의 비율로 측정된 정치적 영향력이나 노동조합 조직률 모두 임금불평등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일부 선행 연구에서와는 다른 결과로 측정 방법이나 분석 방법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좌파 정당이나 노동조합이 최하층 임금 근로자의 이해보다는 좀 더 양호한 상황에 있는 근로자의 이해를 반영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최근 노동시장 내 내부자·외부자의 분리를 강조하는 이론(Linbeck and Snower, 2002; Rueda, 2005, 2006, 2008)의 경우 좌파 정당이나 노동조합 모두 비교적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있는 내부자의 이해는 충실하게 반영하는 반면 실업자나 신규취업자, 비정규 근로자 등 외부자의 이해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좌파 정당의 집권이나 노동조합 조직률의 확대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임금불평등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외에 특기할 점은 고용보호 엄격성이 시장임금 불평등과 부적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고용보호가 엄격할수록 시장임금 불평등은 감소한다. 고용보호 제도가 엄격할수록 근로자는 해고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많은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고용보호의 엄격성과 시장임금 불평등 사이의 관계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숙련편향 기술발전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포함된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역시 임금 불평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가 숙련편향 기술발전의 영향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는 이르다고 판단된다. 숙련편향 기술발전의 경우 어떻게 측정하는 것이 좋은지 아직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기술발전의 속도와 임금불평등의 속도가 불일치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DiPrete, 2007).<sup>9)</sup> 기술 그 자체가 임금불평등을 낳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임금불평등에 더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된 바 있다(Fernandez, 2001). 기술의 발전속도, 그리고 그것이 생산과정에 도입되는 속도 등 숙련기술편향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통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9) 임금불평등은 1980년대 급증한 반면, 기술발전은 1990년대에 급속도로 진행되었다(DiPrete, 2007).

이제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사회복지지출의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모델 1의 경우 소득보장 지출비율과 사회복지서비스 지출비율 모두 소득불평등과 부적 관계를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두 변수의 상호작용 효과를 포함한 모델 2에서는 세 변수 모두 소득불평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세 변수의 효과가 상반된다는 점인데, 소득보장 지출비율과 사회복지서비스 지출비율은 소득불평등과 정적 관계를 보이는 반면, 상호작용 효과 변수는 부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사회복지 지출 두 항목의 효과를 상호작용 효과가 완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소득보장지출비율은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키지만 사회복지서비스 지출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그 효과는 약화된다. 역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지출 역시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지만 소득보장 지출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그 효과는 약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sup>10)</sup>.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앞서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조건으로 본 연구가 가정했던 바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인적자본 이론과 일자리 탐색이론에 의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을 충분히 축적하고 일자리 탐색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야만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시간과 더불어 급하게 취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정적인 경제 환경이 필요하다.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여성을 포함한 가사담당자에게 자유로운 시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소득보장제도를 통해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의 필요성을 감소시킨다. 즉 사회복지제도와 소득보장서비스의 지출이 결합하는 경우 인적자본을 축적하고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조건이 제공되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프로그램 중 어느 프로그램이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노인대상 프로그램과 가족대상 프로그램의 소득보장 지출과 사회복지서비스 지출비율을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프로그램만 포함한 이유는 자유시간의 가장 큰 제약이 가족 내 돌봄 노동이기 때문이다. 모델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는 노인에 대한 서비스와 소득보장 지출이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노인대상 복지지출이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이유 역시 복지지출이 노인 수발자를 돌

10) 본 연구 결과는 모델의 설정 오류로 인해 나타난 통계적 허위성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고정효과 모델에 연도를 통제변수로 추가하고 로보스트(robust)한 표준오차를 사용하여도 사회복지 지출관련 세 변수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사회보험이나 기타 노인관련 서비스를 통해 노인 수발자는 노인 돌봄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신의 시간을 인적자본을 쌓고 다시 좋은 일자리를 찾는 데 투자할 수 있다. 가족 관련 복지지출은 예상과는 달리 소득불평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역시 가족관련 지출이 아동 돌봄 노동에서 자유로워질 만큼 충분히 크지 않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 예로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초등학교 아동의 방과 후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데(OECD, 2008) 방과 후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로 인해 여성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아동수당 역시 노령연금과는 달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많은 것은 아니다. 즉 노인관련 지출은 수발자를 자유롭게 할 만큼 충분하게 높은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가족 관련 지출은 수발자를 돌봄에서 해방시킬 만큼 그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 4. 결과 및 함의

복지제도가 가처분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은 많은 연구들을 통해 확인되어 왔다(이상봉·한준, 2012; 채구묵, 2012; Bradley et al., 2003; Kenworthy, 1999, 2012; Kenworthy, and Pontusson, 2005; Korpi & Palme, 1998). 본 연구의 목표는 선행 연구들을 기반으로 사회복지제도가 시장임금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일자리 탐색이론이나 인적자본 이론에 의하면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적자본을 쌓고,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는 것이 중요하다. 훈련과 탐색이라는 좋은 일자리를 위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시간과 더불어 생계에 대한 불안함이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적자본을 쌓고 일자리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득보장 제도와 사회서비스 제도는 사람들에게 자유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인적자본과 정보를 쌓는 데 필요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산업의 확대가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킨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본 연구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현재 제조업이 점점 쇠퇴하는 현실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주로 서비스 산업의 몫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산업의 확대가 소득불평등 확대라는 원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 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을 보존하면서 소득불평등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공공부문의 고용이 소득불평등과 부적관계를 보인다는 점에서 재정이 허락하는 한 공공부문이 담당할 수 있는 서비스 분야는 공공부문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노동조합 조직률이나 정부 내 좌파 정당 비율 같은 요인들은 소득불평등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좌파 정당이나 노동조합이 노동시장 내부자의 이해를 보장한다는 노동시장 내부자·외부자 이론의 주장을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고용보호의 엄격성은 시장임금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복지지출의 경우 소득보장 지출과 사회서비스 지출 각각은 시장임금 불평등을 확대하는 요인이지만 두 변수의 상호작용 효과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시장임금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두 가지 모두 균형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서비스 없는 소득보장은 일자리 없는 복지 의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며, 소득보장 없는 사회서비스는 저임금 근로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넷째, 노인관련 지출은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데, 이는 복지지출을 통해 돌봄 노동을 담당하는 수발자에게 자유시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사회보험은 가장 중요한 사회복지제도이다. 사회보험이 노령, 실업, 질병 등 근로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보호막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기간 동안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시장임금의 불평등은 근로 기간 이후의 불평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 점에서 시장임금의 불평등을 줄이는 것은 다양한 삶의 위기에 대응해 삶의 질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사회보험 제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삶의 위험에 대해 충분히 보호막이 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최근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여

부족한 소득을 보충하고 있으며, 다양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이 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소득보장제도와 사회복지서비스의 개선과 확충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 참고문헌 □

- 신동규, 장지연 (2012). 소득재분배정책이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완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가 간 비교연구. *사회보장연구*. 26. 4. 357-384.
- 이상봉, 한준 (2013). 소득 불평등의 국제 비교와 한국의 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 - 자본주의 다양성론 입장에서. *현상과 인식*. 118. 117-140.
- 임완섭, 노대명 (2013). 2013년 빈곤통계연보.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채구묵 (2012). 복지국가 유형과 소득불평등 및 빈곤율과의 관계. *비판사회정책*. 37. 325-365.
- Appelbaum, E., Bosch, G., Gautié, J., Mason, G., Mayhew, K., Salverda, W., Schmitt, J, and Westergaard-Nielsen, N. (2010). Introduction and overview. Gautié, J. and Schmitt, J. *Low Wage Work in the Wealthy World*.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Armingeon, K., D. Weisstanner, S. Engler, P. Potolidis, M. Gerber, and P. Leimgruber (2011). Comparative Political Data Set I 1960-2009, [http://www.ipw.unibe.ch/content/team/klaus\\_armingeon/](http://www.ipw.unibe.ch/content/team/klaus_armingeon/)
- Aldersen, A. S. and Neilsen, F. (2003). Globalization and great u-turn: income inequality trends in 16 OECD countries, Breton, R. and Reitz J, G.(eds.), *Globalization and society*. Westport: Praeger Publisher.
- Baumol, W. (1967). Macroeconomics of unbalanced growth: the anatomy of urban crisis. *American Economic Review*. 57(3).
- Bradley, B., Huber, E., Moller, S., Nielsen, F. and Stephens, J. D. (2003). Distribution and redistribution in postindustrial democracies. *World Politics*. 55. 193-228.
- Bosch, G. and Lehdorff, S. (2005). Introduction: service economies-high road or low road, Bosch, G. and Lehdorff, S. (Eds.), *Working in the service sector: a tale from different story*. Abingdon: Routledge.
- Castell, M. (1996).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Chichester: Wiley-Blackwell
- DiPrete, T. A. (2007). What has sociology to contribute to the study of inequality trends? an histor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0(5). 603-618.
- Esping-Andersen, G. and Myles, J. (2011). Economic inequality and welfare state, in Salverda, W., Nolan, B. and Smeeding, Timothy M(Eds.) *The oxford handbook of economic inequal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Esping-Andersen, G. (1990).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Cambridge: Polity Press.

- Fernandez, R. M. (2001).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and wage inequality: evidence from a plant retooling,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7(2), 273-320.
- Hicks, A. (1994). Introduction to pooling. Janoski, T., and A. Hicks, (Eds.). *The comparative economy of the welfare stat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LO (2013). LABORSTAT, <http://laborsta.ilo.org/>
- Iversen, T., and Wren, A. (1998). Equality, employment, and budgetary restraint: The trilemma of the service economy. *World Politics* 50(4), 507-546.
- Katzenstein, P. (1985). *Small state in world market*.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Kenworthy, L. and Pontusson, J. (2005). Rising inequality and politics of redistribution in affluent countries. *Perspectives on Politics*, 3(3).
- Kenworthy, L. (1999). Do social-welfare policies reduce poverty? A Cross-national assessment. *Social Forces*, 77(3), 1119-1139.
- Kenworthy, L. (2011). *Progress for the poo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orpi, W. (1983). *Democratic class struggle*. London: Routledge Kegan & Paul
- Korpi, W. and Palme, J. (1998).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and strategies of equa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 661-87.
- Kuznets, S. (1955).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45(1), 1-28.
- Lindbeck, A. and Snower, D. (2002). The Insider-outsider theory: A survey, *The Institute of the Study of Labor(IZA) Discussion Paper No.534*.
- Meschi, E, and Marco, V. (2007). Globalization and income inequality, *IZA Discussion Paper, No. 2958*.
- Mkandawire, T. (2001). *Social policy in a development context*. Geneva: UNRISD
- Moene, K. O. and Wallerstein, M. (2003). Earnings inequality and welfare spending: A disaggregated analysis. *World Politics*, 55, 484-516.
- Nielsen, F., and Alderson, A. S. (1995). Income inequality and development and dualism: Results from an unbalanced cross-national panel.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 674-701.
- OECD (2008). *Babies and bosses*, <http://www.oecd-korea.org/>
- OECD (2011a). *Growing unequal: Divided We Stand*. Paris: OECD.
- OECD. (2011b). *Education at a glance*, Paris: OECD.
- OECD. (2014). *OECD.StatExtracts*, <http://stats.OECD.org/#>
- Rueda, D. (2005). Inside-outside politics in industrialized democracies: The challenges to social democratic part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9(1), 61-74.

- Rueda, D. (2006). Social democracy and active labour-market Policies: Insiders, outsiders and the politics of employment promotion,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6, 385-406.
- Rueda, D. (2008). *Social democracy inside out: partisanship and labor market policy in industrialized democra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Visser, J. (2011). Data base on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trade unions, wage setting, state intervention, and social pacts, 1960-2010. <http://www.uva-aias.net/207>.
- Wooldridge, J. F. (2010). *Econometric analysis of cross section and panel data*(second edition). Cambridge: The MIT Press.

# Wage Inequality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 Focusing on the Experience of Advanced Capitalist Countries

Kim, Young Bum\*

The object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wage inequality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 The author postulates that the level of social expenditure may show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wage inequality, because the social welfare spending provides free time and economic resources to accumulate the human capital and to search the job information. The data for analysis consist of unbalanced time-series cross sectional data from 17 OECD countries 1990-2010.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each expenditure for income guarantee and for social service shows positive relationship with wage inequality, but interaction between two variables shows negative relationship with wage inequality. Based on the results, the author suggest that the balanced expenditure between social service and income guarantee program is needed in order to alleviate the wage inequality.

**Key Words:**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come guarantee expenditure, social service expenditure, income inequality, globalization, skill biased technology development, service industry

◆ 2014.01.31. 접수 / 2014.02.25. 1차 수정 / 2014.03.06. 게재 확정

\* Hallym University Institute of Aging (twoponej@gmail.com)